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유미리
	담당부서 (과)	기획행정실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전요섭		연락처	02-2100-1737
	과장	전은주		이메일	2081098@mail.go.kr

2021. 06. 09.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2.규제조문	제10조의20		
	3.위임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6.17 ~ 2021.07.2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국조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21.5.28.)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추진 필요</p> <p>- 특정금융정보법은 시행령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함</p>		
	7.규제내용	<p>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p> <p>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함</p>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299호)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9.규제목표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규제 도입에 의한 비용보다 규제 이행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의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12.일몰설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신 설></u>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5. 법 제2조제1호하목5)에 따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하지 말 것
	6. 법 제2조제1호하목5)에 따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
	7. ----- 제6호까지----- -----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시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는 우려 하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발표('19.6월)

-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 국조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21.5.28.)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 관련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필요

- 가상자산사업자가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대안명	규제대안1
규제대안1	내용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함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않도록 함

규제대안2	대안명	규제대안2
	내용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함 ②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않도록 함

규제대안1

-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가상자산거래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에 그 특수관계인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도 취급 금지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3. 규제목표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령 위임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 이행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므로 목적과 수단간 비례가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

○ 기타 고려사항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FATF 국제기준) '19.6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의무,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등을 권고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에 관련된 사항도 함께 이행할 수 있을 것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행정적 집행가능성에는 이상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검사·감독과 관련된 업무는 금융정보 분석원 인력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별도의 재정적 집행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이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향후 평가계획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이후 검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추가 마련

3. 종합결론

- 향후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의적절한 개선이라 할 수 있음